'106억원 사기 피해' 광주시 갬코 사태가 남긴 것

해외무대 투자는 대기업도 신중…행정기관 민간투자 자제해야

검증 안된 기술력 믿다 혈세 탕진·국제 망신

민선 지자체장 '성과내기' 조급증도 '한몫'

광주시가 민선 5기 때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제 투자로 결국 시민 혈세 100억여원을 날리게 됐다.

시는 이례적으로 '국제 사기를 당했다'며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까지 했다. 갬코 투자사기는 행정기관이 민간영역에 대해 직접 투자에 나서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하지만 민선시대 들어 선거직인 자치단체장들이 성과내기에 급급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도 제2의 갬코 사기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갬코 사기 사건은=갬코는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 개발을 목표로 광주시 측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과 미국 측 K2AM이 합작해 지난 2011년 2월 설립한 법인명이다. 앞서 광주시는 2010년 10월 27일 K2AM과 한미합작투자사업 MOU를 체결했다.

시는 GCIC를 통해 1100만 달러를 미국 공동사업자인 K2AM에 지급하기로 하고 650만 달러를 송금했으나 기술력 부족 논란이 일어 LA기술 검증 끝에 지난 2012년 9월 16일 사업 무산을 선언했다.

사업 무산 후 광주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감사원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3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 해 12월 5일 기술력 검증을 소홀히 해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GCIC 김모 대표를 구속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국 측 K2AM 측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박모(40)씨 등 자문위원 2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갬코 사업의 미국측 파트너인 K2AM은 사업 실패가 광주시 사업자의 불성실한 이행 때문이라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냈다. 광주시 측에서도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법원에 K2AM 측을 상대로 70만 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돈은 담보적 성격으로 K2AM이 LA기술테스트에 통과될 경우 미국 측에 지급하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은행 등 제3자 예탁에 의한 조건부 인출 가능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시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 K2AM에 선투자한 650만달러를 회수하고 위약금 920만달러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소송 진행 중 소송비용만 10억원 이상이 소요된데다 미국 K2AM 소유의 자산이 3만달러 안팎으로 파악돼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소송 조정에 나서게 됐다.

광주시는 실제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미국 측 사업 파트너 K2AM과 벌이고 있는 에스크로 계좌 반환 소송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시는 조정과정에서 4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선 투자금 650만달러와 소송비용, 투자법인(GCIC)설립 자본금 30억원 등 110억원 중 단돈 4억원만 건지고 106억원을 날리게 됐다.

이연 실장은 소송 중단에 대해 "소송이 최소 5년 이상 예상되고 여기에 드는 비용도 30억원 이상이 예상됐다"며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K2AM측에는 단돈 2000만원밖에 없어 소송 실익이 없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은 행정 업무에 충실해야**=광주시는 산하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에 미국 K2AM사와의 업무를 맡기면서 관리 감독에는 소홀했다고 시인했다. 특히 미국 K2AM사의 자산과 자본, 기술력, 작업물량 등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절차는커녕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650만달러를 송금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오히려 2011년 12월 27일에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상호면책약정까지 맺고 장비 등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LA기술테스트를 명분으로 에스크로계좌로 70만달러를 추가 송금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였다고 자백했다. 이후 기술테스트가 실패했음에도 70만달러 조차 돌려받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10억여원의 소송비용만 투입하는 등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특히 이번 국제 사기의 원인으로 GCIC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나친 의욕을 꼽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민간영역에 침입해 직접 투자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투자 위험성이 높은 민간 영역에서 공무원 중심의 투자는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무대를 상대로 한 투자는 민간투자의 달인인 대기업들도 신중하게 접근할 정도로 어려운 영역이다. 향후 광주시 등 공공기관이 민간 투자를 자제해야 이유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투자에 나선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한번 꼬이다 보니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한 것이 피해를 키운 꼴이 됐다. 민간 투자자였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초기에 포기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미합작 투자사업 추진일지

날짜	내용
2010.10.27 ▶	광주시·K2AM, 3D 컨버팅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 MOU체결
2011.1.13 ▶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 설립
1.18 ▶	GCIC, 투자금 50만 달러 첫 송금
2.22 ▶	투자금 50만 달러 추가 송금
4.26 ▶	투자금 400만 달러 추가 송금
7.26 ▶	투자금 150만 달러 추가 송금
2012.5.14 ▶	감사원, K2AM 원천 기술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GCIC 김별술 대표 배임혐의로 고발 방안 강구 통보
5.15~7.20 ▶	광주시 LA 현지 조사
7.16 ▶	광주시의회, 조사특위 구성
9.12~14 ▶	LA 현지 기술력 테스트 실시
9.16 ▶	강운태 전 광주시장 기자회견 통해 기술력 테스트 실패에 따른 사업 무산 공식 발표

기 싸움

측근·주변 "남을 명분 없다" 탈당설 지속

강경파 "탈당 무책임한 처사" 사퇴론 고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7일 이틀 동안의 잠행을 마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천하면 박영선 위원장이 임명하는 내용의 수습 방안을 내놓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일단, 당내에서는 박 위원장의 탈당설과 관련, 개인의 정치생명은 물론이고 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야권의 미래와 결부돼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여기에 당내외의 적극적인 만류 등으로 박 위원장의 격앙된 심기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박 원내대표의 측근과 주변에선 '탈당설'이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박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에 남아있을 아무런 명분도 동력도 없으며 당내의 일부 중도 온건파가 함께 움직이는 등 야권 재편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당내 강경파 진영에서는 탈당을 운운한 처신이 무책임한 해당 행위라며 '사퇴론'을 고수, 박 원내대표의 탈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핵심 당직자와 원내대표단은 16일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박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들은 ▲비대위원장은 당이 총의를 모아 추천하면 박영선 위원장이 임명하고,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한다 ▲원내대표직은 세월호 특별법 해결을 위해 마지막 수습 노력을 하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한다는 두 개항의 문구를 만들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범계 원내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은 박 위원장의 의중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박 위원장을 만나 탈당을 만류하고, 거취 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내 일부에선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조기 전대 개최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

박영선 거취결정 임박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국회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 싸움

차기 당권 놓고 계파간 셈법 분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당내 내분이 심화하고 정기국회가 파행을 지속하는데도 정작 당내에서는 후임 비대위원장을 노리는 계파들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 내홍이 겉으로는 박 위원장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실패와 외부 인사의 공동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의견 차이이지만 본질은 차기 당권을 노리는 계파별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비대위원장은 내년 초 전당대회 룰과 각 지역위원장 결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당 대표 선출은 물론 총선 공천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 계파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문희상·정세균·김한길·박지원·문재인 의원 등 중진과 회동에서 차기 비대위원장 선출을 부탁했으나, 계파 간 이해 상충 등의 문제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과 가까운 당의 한 관계자는 16일 "박 위원장이 중진 회동에서 후임 결정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했던 중진들이 왜 서로 싸우고, 서로 후임 비대위원장을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 측 일각에서는 일부 중진들이 당시 후임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놓고, 뒤에서는 친한 의원들을 움직여 박 위원장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계파에서는 특정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밀기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도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파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조경태 의원은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데는 강경한 세력들, 계파로 특권화된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면서 "다시 헤쳐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각자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도파 의원도 "이번에 드러난 당의 고질적 문제는 정권교체를 지상과제로 생각하기보다, 당권 장악에 더 몰두하는 일각의 흐름"이라면서 "박 위원장이 취임 직후 강경투쟁 이미지를 벗겠다며 강경파의 역린을 건드린 이후 이들의 눈 밖에 나 '식물 지도부'가 돼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